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909
----------	------

제출연월일 : 2019. 8.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위탁사무명 :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2. 제안이유

- 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 제9조(운영 및 운영비 부담 등. 2014.3.)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분기관 명시
- 나.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 방안 연구보고서(2016.6)
 - ▷ 하남선은 5호선 본선 열차운행과 연계되어 본선 운영기관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필수업무인 관제, 운전 및 차량의 위탁 필요성과 통합연계운행이 불가피함 <제6장. 운영수지분석. 목적 및 필요성>
 - ▷ 서울 도시철도 연장선에 대한 “건설협약서”와는 별도로 서울시, 철도운영기관과 “운영영협약서” 작성 협의 및 합리적인 운영비 분담 기준 마련 필요 <제7장. 결론>
- 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현재 5호선을 운영하는 철도전문 운영기관을 적기에 선정하여 하남선(5호선 연장구간) 정상개통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가. 「도시철도법 제42조①항」: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 나.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사무 내용

○ 하남선 복선전철(지하철 5호선) 하남구간에 대한 관리운영사업

5. 위탁시설 개요

- 가. 소재지 : 하남시 망월동 일원 ~ 하남시 창우동 일원
- 나. 규 모 : L= 6.609km, 역사 4개소, 차량 4편성 32량
- 다. 지원시설 : 도시철도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6. 민간위탁 개요

- 가. 위탁방법(운영방법) : 일괄위탁 운영(광고, 임대 부대사업 제외)
- 나. 위탁운영기간 : 1단계 개통일로부터 5년,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위탁기관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수탁자간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다.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 철도운영 위탁관련 법률자문(법무법인 하나로 외2개 기관) 결과 연장형 광역철도 수의계약으로 위탁 가능
- 라. 위탁인원 : 전체 215명. 2% 범위 내 탄력적 운영
- 마. 결산 및 정산: 1년 단위 실시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경기도 원가절감용역안 참조(2016.6)

※ 서울교통공사의 현행 인건비 적용 시 추정 기준 운영비는 변경 될 수 있음.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협약서(안)

※ 본 동의(안)은 위·수탁 협약 추진 절차에 따라 내용이 일부 달라 질 수 있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1부.

2. 경기도 원가절감용역 주요내용 1부.

3.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1부.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철도법」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한다.
-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원가절감용역 주요내용

□ 경기도 원가절감용역 주요내용(2016년 실시, 2020년 기준)

○ 하남선 복선전철 이용수요 예측

역 사 별	합 계		서울방면		하남방면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합 계	43,037	38,111	38,257	4,481	4,780	33,630
미 사	24,675	21,306	20,377	4,070	4,299	17,236
하남풍산	2,250	1,775	2,035	188	215	1,587
하남시청(덕풍신장)	9,046	7,739	8,780	223	266	7,516
하남검단산	7,065	7,291	7,065	-	-	7,291

○ 예상운송수지 및 예상수입금, 운영비

(단위: 백만원/年, 하남선 4개역 기준)

구 분	계	운임수입	상가임대	편의시설임대	광고시설임대
예상수입금	16,201	14,980	537	65	619

※ 운임수입은 총 승차인원(인) × 기존 노선의 1인당 평균 운임(953.6원)을 적용

구 분	계	인건비	직접경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비고
기준 운영비	24,149	11,560	6,381	4,629	1,579	4역 기준

※ 운영비는 道 운영비 절감 용역('16.6)과 철도운영 자문회의('18.6) 설명자료에 근거

구 분	예상수입	위탁 운영비	대수선비	운송수지
운송수지	16,201	24,149	4,400	△ 12,348(적자)

※ 개통 후 내구연한 주기에 따른 시설(차량) 대수선, 대체투자비(年 44억원) 포함

◇ 서울교통공사의 현행 인건비 적용 시 추정 기준 운영비는 변경될 수 있음.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19. 8. 13.(화) 잠정실무합의(안)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2019. 8.

하 남 시
서 울 교 통 공 사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하남시(이하 “하남시”라 한다)와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라 한다)는 「도시철도법」 제42조에 의하여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 제9조에 따라 하남선 복선전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범위) 본 협약의 규모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2. 사업구간 : 서울도시철도 5호선 상일동역~H5역(5개 정거장)
가. 서울 구간 : 하남선 기본계획 기점~시·도 경계지점(1km116m)
나. 하남 구간 : 하남 시·도 경계지점(1km116m)~종점(하남7km725m)
3. 사업규모 : 7.725km(기점 서울000k000~종점 하남7k725)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 또는 “본 협약”은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을 말한다.
2. “본 사업”은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을 말한다.
3. “본 사업시설”은 본 사업과 관련된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말하며, 협약 체결일 이후 협약당사자들의 합의로 추가 또는 변경된 시설을 포함한다.
4.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는 “하남시” 및 “교통공사”를 말한다.

다.

5. “위탁기관”이란 “서울시” 및 “하남시”를 말한다.
6. “운영기관”이란 “교통공사”를 말한다.
7. “위·수탁자”란 “위탁기관” 및 “운영기관”을 말한다.
8. “위탁운영사업”이란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관이 시행하는 본 사업구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운수사업, 부대사업 등 운영전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9. “기존구간”이란 운영기관이 기 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 1-8호선을 말한다.
10. “부대사업”은 도시철도차량 및 본 사업시설 등을 활용한 운송사업 외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11.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탁재산”은 “본 사업”과 관련된 시설, 지적재산권, 특허권, 구분지상권 등 운영기관이 위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은 재산을 말한다.
13. “운영개시일”이란 하남선 복선전철의 영업운영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14. “운영수익”이란 운영기관이 본 사업의 수탁 시행에 따른 운수사업수익, 부대사업수익 및 기타 모든 수익 등을 말한다.
15. “운영경비”란 본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등 제반경비(유형자산 취득 제외)에 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6. “운영이익금” 또는 “운영결손금”이란 운영수익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7. “정산”이란 본 사업의 연간결산 후 운영이익금 발생시 해당금액을 운

영기관이 위탁기관에게 분배하고, 운영결손금 발생시 해당금액을 위탁기관이 운영기관에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18. “행정구역 관할역 비율(이하 ‘관할역 비율’ 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 구간에 있는 서울시 관할역(1개)과 하남시 관할역(4개)의 역수에 따른 분배비율을 말한다.
19. “행정구역 거리비율(이하 ‘거리비율’이라 한다)” 이란 본 사업 구간에 있는 서울시, 하남시의 행정구역 거리비율에 따른 분배비율을 말한다.
20. “정산보고서”란 운영수익과 운영경비 등을 검증 및 확정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에 의한 합의된 절차수행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 및 정산결과를 말한다.
21. “사업연도”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말한다. 단,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 이며 사업종료 연도의 경우에는 1월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22.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협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협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3. “1단계”란 본 사업 기점부터 4km755m까지로서 H1, H2, H3 정거장을 포함하며, “2단계”란 1단계 이후부터 본 사업 종점인 7km725m까지로서 H4, H5 정거장을 포함한다.
24. “사업비”란 본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 등의 운영경비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5. “대체투자”란 기존의 자산이나 설비 등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 또는 개량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제4조(위탁운영기간) ① 본 사업의 위탁운영기간은 1단계 개통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사업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위탁기관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수탁자 간 협의하여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열차 운행 간격) 본 사업의 열차 운행 간격은 평일기준 RH 10분, NH 12분~24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6조(운영인력) ① 본 사업 운영인력은 215명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운영인력의 2%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영인력계획은 제23조(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한다.

③ 운영기관은 총 운영인력 범위에서 직렬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기존구간의 근로조건, 근무환경 등 근무제도 변화 등으로 본 사업의 운영인력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수탁자 간 합의에 따라 운영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수탁자는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위탁운영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⑥ 운영인력의 현업사무소는 법령 등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시 승객대피 및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할 있는 적절한 위치에 조성하고, 근무환경을 위해 지상화를 원칙으로 하며, 동 시설 설치 및 개선에 위·수탁자는 적극 협조한다.

제7조(운영기관의 업무범위) ① 위탁기관이 운영기관에 위탁하는 본 사업

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선 복선전철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운송 및 운임의 징수 관리
 2. 하남선 복선전철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3.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4.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 중 부가통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업무
- ② 제1항의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기관의 의무 및 권한) ① 운영기관은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운영기관은 기존구간과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③ 운영기관은 본 사업 운영기간 동안 본 사업 구간의 재산과 시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시설 등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 단, 본 협약 상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운영기관은 위탁기관이 본 사업시설 내에서 시행하는 점검·용역·공사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요청에 대하여 인력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를 할 수 있으며 감독자 및 작업자 등의 출입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기관의 권한) ① 위탁기관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 시설물에 대한 개조 및 변경, 대체투자 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본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운영기관에 다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2. 정산보고서

3. 기타 본 사업운영에 관련된 사항

③ 위탁기관은 지도·점검 결과 운영기관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운영기관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운영기관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제③항에 따라 위탁기관이 부당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기관의 의무) ① 위탁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건설협약서 및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위탁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관의 운영결손금, 유형자산 취득비용, 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이 기존구간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본 사업 구간의 수송수요 창출·증가를 위하여 노선버스, 마을버스 등의 연계교통수단이 본 사업구간 내 정거장에 연계되도록 협조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법령 제·개정으로 시설물 등의 점검, 개량, 추가, 변경되는 시설·설비 등의 비용 및 추가 인력투입에 따른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② 본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본 협약과 관련해서 고용된 근로자는 본인 희망시 새로 수탁 받는 운영기관에 고용승계가 되도록 위·수탁

자는 노력한다.

③ 위·수탁자는 본 사업 개통준비에 따른 기관 간 업무범위를 별도로 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수익) 본 사업의 운영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운수사업수익 : 본 사업구간의 승차권 판매수입과 교통카드 사용수입, 특종여객수입, 반환여객수입, 연락운임 등을 말한다.
2. 부대사업수익 : 본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통신관로 사용료 등 통신관련 등의 사업수입을 말한다.
3. 기타사업수익 : 본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카드충전수수료, 교통카드판매대행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13조(운영경비) ① 본 사업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인건비

가. 본 협약에 따른 운영인력 인원수에 운영기관 직렬별 평균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근무형태는 교대 또는 통상으로만 구분한다.

나. 운영기관의 급여 관련 제규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 등을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을 포함한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본 사업에 근무한 기간만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 위·수탁자가 합의하여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실제 지급액으로 한다.

2. 경비 : 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운영기관 회계관련규정에 명시되는 비용으로 실비로 반영한다.

3. 기타비용 : 운영기관 소유의 모터카 등 특수장비 사용료, 본 사업구간 운영인력 이외의 인력을 활용하여 법령과 위탁기관 요구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 발생하는 비용 등은 실비(부대비 포함)로 반영한다.(부가가치세 별도)

4. 소모품비 등 : 본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저장품 등을 취득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실비(부대비 포함)로 반영한다.
5. 일반관리비 : 본 사업의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및 '경비', '기타비용', '소모품비 등'의 합계액에 5%를 적용한다.
6. 위탁수수료 : 위탁기관이 운영기관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 및 '경비', '기타비용', '소모품비 등',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3%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계정과목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제14조(유형자산 취득비용 부담 등) ① 유형자산('무형자산' 포함, 이하 같음)은 위탁기관의 부담으로 취득하며, 이 경우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② 유형자산 취득비용은 행정관할 구역별로 부담하고 취득된 유형자산은 위탁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 공통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 취득비용은 위탁기관이 거리비율로 분담한다.

③ 위탁기관은 유형자산 중 기존구간에 반영되거나 반영된 유형자산 취득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 반영해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본 사업 유형자산에 대해 기존구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득 및 운용, 유지·보존을 한다.

⑤ 운영기관은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관은 다음 연도 유형자산 취득 비용을 분기별 수급계획에 의해 매 전 분기 말일까지 제②항의 분담비율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4분기는 1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운영기관은 위탁기관이 상기 제6항에 따라 지급한 유형자산 취득비용을 다음 연도 4월말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경비 집행 및 배분 기준) ① 인건비, 경비, 기타비용, 소모품비 등 본 사업구간의 운영경비는 기존구간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운영기관은 본 사업 운영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제규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등을 적용한다.

③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역무분야 : 관할역 비율
2. 관제, 차량, 승무분야 : 거리비율
3. 기술분야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구간 원가분석 용역보고서」에 따라 역사 58.18%, 본선 41.82% 비율

제16조(운영경비 지급) ① 운영기관은 매 분기 개시 20일 전까지 분기 운영경비를 청구하고, 위탁기관은 매 분기 개시 후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1단계 개통 시에는 영업개시일 1개월 전에 위·수탁자 간에 협의하여 지급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12조의 운영수익금을 본 사업의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운영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수익 및 사업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위·수탁자는 제1항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한다.

③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기관 및 운영기관 합의로 선정된 회계법인을 통해 운영기관 회계규정, 기업회계기준 등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기준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결산 및 정산을 검증·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산이 확정된 때로부터 20일 이내 재정산을 시행한다.

⑤ 연락운송운임 정산 등 추후에 확정되는 운영비에 대한 정산은 별도로 추가 실시한다.

제18조(운임의 징수 등) ① 본 사업구간 운임은 운영기관의 운임을 적용하고 운임조정은 도시철도법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한다.

② 운영기관과 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운임정산은 「도시철도법」 제34조(연락운송)에 따른다.

③ 운영기관은 징수한 운임 등에 대하여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다르게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위탁기관은 열차운행 및 승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상가 및 광고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광고 부대사업을 운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한다. 다만, 그에 따른 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운영기관에게 본 사업구간의 부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사업 시설물에 대한 수선, 이전, 변경 등을 요구할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 등은 별도로 협의한다.

제20조(유지관리) ① 운영기관은 본 사업구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본 사업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관련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운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시설물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의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로서의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④ 위탁기관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인수한 시설물의 하자보수 및 관리를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위·수탁자는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수탁재산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운영개시 후 운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해 운영기관의 기준, 방법 등에 따라 재물조사를 연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한다.

② 운영기관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재산의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③ 운영기관은 본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운영기관은 이에 관하여 위탁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 사유로 수탁재산 변경 등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은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운영기관은 위 변경 사항을 수탁재산 대장에 반영한다.

⑤ 운영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위탁기관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위탁기관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운영기관은 본 협약이 만료 또는 해지 되었을 때에는 수탁재산 대장을 기준으로 원상복구(일반적인 마모 및 감가상각은 제외)하여 위탁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는 위·수탁자 간 또는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공동으로 본 사업에 관한 점검 및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수인계하는 수탁재산은 시설, 비품,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예비부품 재고와 관리 중인 본 사업관련한 문서, 기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④ 운영기관은 본 협약 종료시 차기 운영기관에 본 사업시설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23조(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① 운영기관은 매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운영계획' 이라 한다)을 관련법령 및 운영기관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연도 운영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1단계 개통년도의 운영계획은 개통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운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운영기관의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보험가입) 운영기관은 법령 등에 따라 기존구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종 보험에 가입한다.

제25조(운영협의회 설치) ① 본 사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수탁자는 운영협의체로서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위험배분 및 협약의 종료

제26조(위험배분원칙) 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손해 및 위험 중 귀책사유가 협약당사자에게 있을 경우 당해 손해 및 위험을 발생시킨 당사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위험(책임)배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27조(운영기관 귀책사유 및 처리) ① “운영기관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구간의 운영을 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중단할 경우
2. 운영기관이 해산 및 청산할 경우(단, 운영기관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등
3. 도시철도와 관련한 관계 법규 및 본 협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운영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운영비 증가 및 운영수익의 감소, 기타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부담한다.

제28조(위탁기관 귀책사유 및 처리) ① “위탁기관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위탁기관이 운영기관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2. 위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협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등

② 위탁기관 귀책사유로 운영비의 증가 및 수입 수입의 감소, 기타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제29조(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시설복구 등의 비용 부담) 운영기간 중 불가항

력 사유로 발생한 시설물의 피해복구 비용, 운영 손실,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은 해당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당해 부분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제3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기관은 운영기관이 본 협약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기관이 본 협약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탁기관이 본 협약 제16조(운영경비 지급)의 금액 또는 매년 지급해야 할 결손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180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위·수탁자 간에 합의할 경우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본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협약해지 등에 따른 보상) ① 본 협약 제30조제2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 등이 된 경우 위탁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인건비, 제경비 등 운영기관이 부담하는 운영비 이외에 운영기관의 손해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 등이 된 경우 위탁기관의 손실금액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분쟁의 해결

제3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60일 이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 간

의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고, 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33조(분쟁금액의 지급방법) ① 위·수탁자 중 어느 일방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된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위·수탁자는 일부 이의가 있는 금액을 보류하고 나머지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금액은 분쟁대상 총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분쟁의 해결 시까지 보류된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에 대하여 제33조(이자지급)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이자 지급 등

제34조(이자지급) ① 위·수탁자는 운영결손금, 운영이익금 및 유형자산 취득비용 등에 관한 본 협약에 따른 지급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급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미지급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지급지연 사유가 운영기관에 있는 경우
3. 위·수탁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위탁기관이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사업비가 위탁기관의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위·수탁자 간에 사업비 지급시기를 달리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5. 제17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에 의한 사업비 정산 및 반환의 시기가

행정소요일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체되는 경우

제35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본 협약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자 간 합의 없이는 본 협약상의 권리를 양도 및 이전하거나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지적재산권) 운영기관이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중 취득한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은 위·수탁자 간의 공동소유로 한다.

제37조(적용 및 해석) ①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르고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 협약의 자구 및 내용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운영협회의 해석에 따른다.
③ 본 협약서의 기준구간 적용 시 1~4호선과 5~8호선의 기준이 상이할 경우 5~8호선 기준을 적용한다.

제38조(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수탁자 간의 합의로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② 본 협약 체결 후 위·수탁자 간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별도의 변경 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위탁자의 지위 이전) 본 사업시설 자산이 소유권 이전 등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이전·변경되는 경우에 이전·변경된 자에게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40조(협약이행 및 효력발생) ① 본 협약내용은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자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개통시기) 협약당사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에서 본 사업구간의 개통일 결정시 본 협약 체결 후 운영기관의 인력채용, 기관별 승인절차, 영업시운전, 관련기관 승인 등 행정소요일수 등을 감안하여 확정이 되도록 하고 정상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공동 노력한다.

제2조(운영비 부담)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 제9조제1항의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분은 서울시 구간은 교통공사 부담 또는 수익으로 한다.

2019. 8



하 남 시 장



서 울 교 통 공 사 사 장

<붙임> 결산 및 정산보고서

구분		내 용
1. 운영수익		
	운수사업수익	
	부대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	
2. 운영경비		
① 인 건 비		급여와 임금, 제수당, 퇴직급여 등
② 경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포상비	
	재료비기타	
	잡비	
	⋮	
③ 사업비 소계(①+②)		
④ 일반관리비		③의 5%(부가가치세 제외)
⑤ 위탁수수료		③+④의 3% (부가가치세 제외)
⑥ 합계(③+④+⑤)		
⑦ 부가가치세		
총사업비 (⑥+⑦)		
3. 순손익(1-2)		